

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박 선 경** · 신 진 욱***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쟁점과 연구 가설	V. 결론
III. 자료와 변수 측정	

국문요약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가역할 확대의 당위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복지와 노동보호 등 다양한 국가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이념 및 정치적 당파성이라는 장기적 변수와 코로나 피해, 정부대응 및 재난지원금 평가 등 단기적 변수가 향후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이념성향은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치적 당파성

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코로나 피해 경험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가역할 강화에 대한 동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집권당의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국가역할 확대를 더 지지했다.

주제어: 코로나19, 국가역할, 국가책임,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성과 평가, 재난지원금

DOI: 10.17331/kwp.2021.37.1.005

* 이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NRF-2018S1A3A2075609). 논문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귀중한 논평을 주신 고려대 김성은 교수님, 강우창 교수님, 경상대 배진석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저서 및 논문 “젠더 내 세대격차이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이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권 2호: 5-36 (2020) 외.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국가역량의 개념과 다차원적 분석틀: 국가역량 레짐의 다양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54권 1호: 65-100 (2020) 외.

I. 서론

다양한 사회문제와 정치적 현안 중 무엇이 국가의 책임이며, 정당한 국가 역할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집단별, 개인별로 다르다는 전제하에, 이 차이를 투표를 통해 자유롭고 공평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합된 결과에 따라 국가는 어떤 문제는 입법과 행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다른 문제는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게 된다. 그러나 재난, 전쟁, 경제위기 등 정치공동체의 중대 상황에서 정당한 국가 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투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감염병 확산은 그 속성상 공공보건의 영역으로서 시장의 원리나 개인적 해결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다수 나라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전면으로 부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결과를 단순히 ‘국가의 귀환’이라고만 정의내리는 것은 현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표피적 이해방식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귀환하고 있는, 또는 귀환을 요구받고 있는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동일하지도 자명하지도 않다. 오늘날 세계의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국가는 북구형 사민주의 정치를 의미하기도 하고(Berman, 2020),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기업들과 정부, 공공부문 간의 협력체제(Schwab, 2020), 혹은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들이 구성하는 지역 공공영역이기도 하며(Zielonka, 2020), 중국처럼 기

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방역 국가의 부상을 뜻하기도 한다(Macfarlane, 2020).

실제로 각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방역을 위한 규제와 강도, 민주적 거버넌스의 약화 여부, 위기 대응 재정정책, 고용유지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등 여러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나아가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기대도 국가별로 다르며, 그것은 국가개입의 확대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가라는 다형체(Mann, 1993: 75)의 여러 제도적 차원들의 강약의 배열은 세계 공통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단히 다양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응 및 그 결과에 관해 국내에서도 그동안 정부정책,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며, 국제 비교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다(김동택 외, 2020; 김영근, 2020; 박성욱, 2020; 윤기웅·공동성, 2020; 윤희식, 2020; 이기쁨, 2020; 임성호, 2020; 홍성만, 2020). 하지만 한국사회 시민들이 코로나 위기의 경험에서 어떤 정치적 교훈을 도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떤 의식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학문적 분석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국가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만약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감염병 위기 극복에 한정된 의견일까, 아니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국가 책임의 확대로까지 이어질까? 다수 국민은 다양한 국가의 역할 분야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것일까? 향후 방역 뿐 아니라 복지, 노동, 조세 등 더 넓은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국가 역할의 범위를

치안과 질서유지, 행정능력, 조세징수, 노동자 권익 보호, 경제적 격차 해소, 기업활동 지원 등 6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지지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조사했다. 나아가 각 영역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가 역할의 확대에 대한 동의와 반대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념 가설, 당파적 지지 가설, 정부성과 기반 평가 가설, 개인적 피해 가설, 그리고 재난지원금 영향 가설이라는 다섯 가지 가설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II장에서 이 논문이 다루는 이론적 쟁점과 가설들을 논하고 III장에서 자료와 변수 측정 방식을 서술한 뒤에, IV장에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반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끝으로 V장에서 이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서술할 것이다.

II. 이론적 쟁점과 연구 가설

1. 이론적 쟁점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에 직면하여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확대되었다. 국가는 현대사회에서 영토와 국민 공동의 사안에 집중하는 것을 존재이유로 하는 유일한 공적 조직이기 때문에(Mann, 1988: 22), 정치세력들의 대응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라는 객관적 현실 자체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대응할 수 없는 성격의 상황이다(Krugman, 2020). 나아가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은 도덕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성의 배반’으로 규정되기까지 한다(Höffe, 2020).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위기 속에서도 ‘정당한(legitimate)’ 국가개입의

강도와 범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치열한 논쟁과 갈등의 원천이 된다. 일례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집회 금지 등의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염자의 동선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적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재정 개입과 확대에 대해서도 격렬한 이견과 논쟁이 존재하며, 정부 재정정책의 적극성 정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코로나 시대에도 ‘국가의 역할’은 객관적 상황 자체에 의해 주어진 합의 사항이 아니라 첨예한 정치사회적 갈등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러한 견해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이념적 차이이다. 현대 정치이념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안전과 질서유지, 복지와 노동권 보장, 기업 규제 또는 지원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진보 이념은 대체로 국가의 조세, 노동보호, 재분배 활동을 지지해 온 데 반해, 보수 이념은 국가가 치안과 안전보장에 집중하고 사회와 시장의 작동에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 오늘날 여러 민주사회에서 계급균열의 위상은 악화됐지만, 이러한 이념과 가치의 대립은 정치적 선호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Dalton, 2010).

이와 같은 차이를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 적용한다면, 진보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전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반대로 보수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전염병 위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는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민들의 이념성향이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러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기평가 이념은 경제정책이나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없으며 대북관이나 통일관과 같은 외교안

보 문제와 더 강한 연관이 있었다(김무경·이갑윤, 2005; 박경미·한정택 외, 2012; 윤성이, 2006; 윤성이·이민규, 2014). 한편 최근 다른 연구들은 불평등과 복지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분배 관련 이슈와 자기평가 이념 간에 상관성이 강해진 경향을 발견하기도 했다(강원택·성예진, 2018; 윤성이·이민규, 20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념이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흥미로운 경험적 검증 대상이다.

이념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견의 원천은 정치적 당파성(political partisanship)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때, 시민들은 추상적, 이론적 개념으로서 국가를 떠올리기보다 현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정권’을 판단의 준거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시민들이 국가역할 확대를 현 정권의 역할 확대로 어림셈으로(heuristically) 한정하여 이해했다면, 현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 정권의 지지자는 정권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국가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국가역할의 확대로 인해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책 결과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하여 국가역할 확대에 반대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실제 최근 한국정치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 하상웅과 길정아는 각 시점에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 정부신뢰가 달라질 뿐 아니라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그러한 당파적 편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길정아, 2019; 하상웅·길정아, 2020). 또한 금현섭과 백승주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보수 유권자들이 정부신뢰가 높아지고 정부지출 증가를 지지하는 경향을 발견하고 이를 당파성에 따른 ‘이념적 희생’ 이론으로 설명한 바 있다(금현섭·백승주, 2010).

그런데 이제까지 서술한 이념 및 정치성향은 대체로 긴 시간에 걸쳐 형

성되고 지속되는 세계관의 일부인 경우가 많지만, 국가 역할에 대한 의견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나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은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 역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에 대한 관념 자체가 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 상황의 국면적인 변수가 국가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재난, 전쟁, 경제위기 등 중대한 위기의 ‘경험’이 국가의 중요성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국가의 군사적 활동 뿐 아니라 조세, 행정, 복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가강화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비약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Joas, 2003). 또한 자연재난 역시,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 중세의 종교적 거버넌스에서 근대국가 거버넌스로의 이행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국가의 강화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민병원, 2020). 경제위기의 경우, 이념이나 당파성과 독립적으로 대량실업 등 체험적 상황 요인이 복지정책 지지 확대에 직접 영향을 준다(Blekesaune and Quadagno, 2003).

그러한 개인들의 위기 경험과 더불어,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성과와 효용을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향후 정부 역할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샷슈나이더(Schattschneider, 1935: 288)의 통찰은 제도가 그 제도를 옹호하는 이해당사자 집단을 창출하는 피드백 효과의 맥락에서 종종 언급되지만(Pierson, 1993), 정책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의 경우 문화가 정책을 규정하는 힘만이 아니라, 정책이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함께 작용한다(Pfau-Effinger, 2003; Svalfors, 2007).

코로나19와 같은 큰 위기 상황에서 정부대응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

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국제비교 관점에서 대단히 우호적인 편이었고 대통령·여당에 대한 지지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정부여당의 코로나 대응 및 야당의 실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박선경, 2020). 그런 맥락에서 정부 대응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향후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특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가 국가역할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여기서 핵심 이슈는 복지국가 연구에서 ‘재분배의 역설(paradox of redistribution)’(Korpi and Palme, 1998)이라고 불리는 정책효과 여부인데, 이는 사회권 개념에 기초하여 폭넓은 계층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넓히고 복지예산의 파이 자체를 키워서, 역설적이게도 특정 계층에 집중한 제도보다 결과적으로 빈곤 해소와 불평등 완화 효과를 높인다는 주장이다. 정치사회학적으로 재정식화하자면, 국가의 예산, 조직, 인력이 배분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 복지 부문의 총량을 주어진 상수로 놓고 그 안에서 누구에게 먼저, 더 많이 줄 것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복지 부문의 총량 자체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 더 큰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위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복지 정책의 효용이 수혜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평가가 향후 국가의 복지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데 대한 동의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단지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잔여적 복지와 구분되는 복지국가의 비전을 추구하는 제반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큰 질문에 관련된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 효과나 즉각적인 재분배 효과에 관해서는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김미루·오윤해, 2020; 김승연, 2020; 양재진, 2020; 이태석 외, 2020; 홍민기, 2020), 그것이 불평등 완화나 노

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에 어떤 ‘정치적’ 효과를 낳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종합하자면, 이 논문은 위에서 서술한 이론적 쟁점들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이념성향 및 정치성향과 같은 장기적 변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개인적 피해와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용에 대한 평가가 향후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인식에 각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2. 연구가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이론적 쟁점들을 구체적인 연구가설로 정식화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이념 가설’로서,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코로나19 전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그 밖의 여러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반대로 보수이념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 전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것 이외의 부분에서 국가 역할 확대에는 반대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이념 가설

진보 성향의 사람일수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영역에서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높은 반면, 보수 성향의 사람일수록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까지 국가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 반대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당파적 지지 가설’로서, 이 가설은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강화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당파적 지지 가설과 이념 가설은 집권세력의 이념성

향에 따라서 충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보수적인 정권이 집권세력일 경우, 이념적으로 보수이면서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길 선호하는 이념성향과 당파적 이익에 따라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권의 역할 확대 사이에서 갈등할 수도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경우 여권 지지자들은 진보 성향이 많기 때문에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반대층은 국가 강화를 반대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보수 성향을 가진 여당 지지자도 있고, 진보 성향이지만 보수야당 지지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파적 지지의 영향을 이념과 별개의 독립적 가설로 다룬다.

가설 2. 당파적 지지 가설

현 정권을 지지할수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영역에서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높은 반면, 현 정권에 반대할수록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까지 국가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 반대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가설3, 가설4, 가설5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험과 정부의 방역대응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와 같이 국면적, 단기적인 변수가 향후 국가 역할의 확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다. 투표 선택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가설1의 이념이나 가설2의 당파성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되는 세계관으로서 단기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심리적 정향이다(Campbell and Converse et al., 1960). 그에 반해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 유동적 상황에 대한 태도이므로 투표 선택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이슈투표에서 이슈에 대한 태도에 가깝다.

먼저 세 번째 가설은 정부대응에 대한 '성과기반 평가(performance-based evaluation) 가설'로서, 이 가설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다

고 평가할수록 국가의 역할 확대에 더 찬성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응했다고 평가한다면, 이런 성과를 낸 정부에게 역할을 더 주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성과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당파적 지지 가설과 비슷해 보이지만, 당파적 지지 가설과 달리 조건적이며 유동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어떤 한 시점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반하여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한 사람들도, 상황이 변하여 정부의 대응에 불만족하게 된다면 국가 역할 확대에 반대하게 될 수 있다.

가설 3. 정부성과 기반 평가 가설

대통령, 행정부, 지자체, 방역기관 등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잘 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영역에서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네 번째 가설은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피해정도가 국가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환경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이지만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는 다르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해고, 실직, 근무형태 변화, 소득 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고, 그 피해 정도는 종사부문, 직업, 고용형태, 학력 등에 따라 다르다. 즉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결과는 불평등하며, 그러한 재난 불평등이 국가 역할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4. 코로나19 피해 가설

코로나19로 인해 본인 또는 가구 소득의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

나 감염·실직의 위험을 크게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영역에서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가설은 재난지원금의 효용에 대한 평가가 보다 일반적인 복지태도와 국가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정책 중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가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한 경우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이었던 만큼, 지급 대상과 액수, 지급 방식 등 여러 면에서 국민적 관심이 컸다. 한국에서 과거 권위주의의 국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만을 강조했었고, 민주화 이후에 시민의 권리의식과 민주적 권리 행사의 경험은 증가했지만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경험은 부족했다. 이런 배경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관해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인식의 전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가설 5. 재난지원금 효과 가설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인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영역에서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상의 다섯 가설이 제시하는 독립변수들은 장기적 요인(가설1, 가설2)과 단기적 요인(가설3, 가설4, 가설5)으로 구분되는데, 이처럼 상이한 속성을 가진 독립변수들은 경우에 따라 이론적으로 상반된 예측을 함축하기도 한다. 여기서 상이한 속성을 가진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시간 학파의 ‘인과성의 깔때기 (funnel of causality)’ 개념을 빌려올 수 있다(Hofferbert, 1974: 228; Simeon, 1976: 556). 이념이나 당파성은 투표 선택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인과성의 깔때기의 시작점으로써, 큰 틀에서 개인의 정치적 태도나 인식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으로 선행적으로 작동한다. 한편 이 깔때기의 끝에는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가 위치하며, 일시적인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최종적인 정치적 선택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

이 접근법을 본 연구의 관심사인 국가 책임과 역할에 대한 태도의 형성에 적용해본다면, 이념과 당파성이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태도를 일차적으로 결정짓지만, 정부의 대응이나 본인의 피해 정도 혹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보상의 정도 등 단기적인 정치적 정책적 상황에 따라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태도가 바뀌거나 혹은 태도의 강도가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상시적 요인과 단기적·유동적 요인 간 다양한 조합은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장기적·상시적 요인인 이념(가설1) 혹은 당파성(가설2)을 한 축으로 하고, 단기적·유동적 요인인 정부성과 평가(가설3),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피해 정도(가설4)와 재난지원금의 효과(가설5)를 다른 축으로 하면 총 6가지의 상호작용 효과의 가능성이 제시된다.

<표 1> 장기적·상시적 요인과 단기적·유동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단기적 요인		
		성과기반 평가 (가설 3)	코로나19 피해 (가설 4)	재난지원금 (가설 5)
장기적 요인	이념 (가설 1)	가설 1 * 가설 3	가설 1 * 가설 4	가설 1 * 가설 5
	당파적 지지 (가설 2)	가설 2 * 가설 3	가설 2 * 가설 4	가설 2 * 가설 5

예를 들어, 이념 가설과 코로나19 피해 가설 간 상호작용을 생각해보자. 만약 두 가설이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면, 보수 이념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부는 이론적으로 상반된 예측을 하게 된다. 보수 성향의 사람은 국가 역할 확대에 반대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은 사람은 국가 역할 확대에 찬성할 것이다. 만약 보수 성향의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면 이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경험에 의해 국가 역할 확대에 찬성하게 될까, 혹은 개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국가 역할 확대를 반대할까? 비슷한 논리가 당파적 지지 가설과 정부성과 기반 평가 가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두 가설이 모두 설명력이 있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정부대응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은 당파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 확대에 찬성할 것인가? 혹은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성향에 따라 국가 역할 확대에 반대할 것인가?

이처럼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요인과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요인들의 이론적 예측이 충돌할 때 어떤 요인이 더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IV장에서 먼저 다섯 가설 각각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은 가설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여 상반된 이론의 효과를 확인해볼 것이다.

Ⅲ. 자료와 변수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여론조사 자료는 고려대학교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 사업단이 의뢰하여 한국리서치가 시행한 웹조사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견 등을 다루고 있어서 본 연구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이다. 전국 만 18세 이상 85세 미만

성인 남녀 총 1,507명이 2020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웹조사방식으로 설문에 응답했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했다.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응답에서부터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까지 총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세 가지 문항에 대한 답변을 1에서부터 4까지의 4점 척도로 측정했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각기 다른 활동 영역에서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의견이다. 찰스 킬리가 역사적으로 보편적인 국가 활동 영역들을 이론화한 틀에 기초하여(신진욱, 2020; Tilly, 1990), 코로나19 위기 동안 치안과 질서 유지, 행정능력, 조세수입, 노동자 권익의 법적 보호, 경제적 격차 해소, 그리고 기업활동 지원의 여섯 개의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물었고 ‘매우 반대’에서부터 ‘매우 동의’까지 5점 척도의 변수로 측정했다.¹⁾

향후 분석 결과 부분에서 서술하겠지만, 여섯 가지 영역의 국가 역할 확대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될 수 있다. 위치이슈(position issue)는 이슈의 성격이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이슈를 말하며, 합의이슈(valence issue)는 평화, 안전, 부패척결 등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입장을 공유하고 동의하는 이슈를 말한다(Stokes, 1963). 국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에서 치안과 질서유지, 행정능력 강화 등은 대다수 시민이 동의할만한, 그래서 이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유할만한 합의이슈의 성격

1) 여섯 가지 문항들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시대에 국가 역할의 확대에 관한 다음의 견해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치안과 질서유지를 강화해야 한다. 2. 정부의 행정능력이 높아져야 한다. 3. 정부의 조세수입이 높아야 한다. 4. 노동자 권익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5. 정부가 경제적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한다. 6. 기업 활동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① 매우 반대, ② 약간 반대, ③ 현행 유지, ④ 약간 동의, ⑤ 매우 동의.”

을 가지고 있다. 반면, 노동자 권익 보호, 경제적 격차 해소, 기업활동 지원 등은 이념적 당파적 성향에 따라 찬반 입장이 생길만한 위치이슈에 가깝다. 국가 역할에 대한 영역이 합의이슈적 성격의 영역인지 위치이슈적 성격의 영역인지에 따라 각 가설의 효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통계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설 1의 독립변수인 이념은 기본적으로 자기평가 이념으로 측정했다. 본인의 정치이념이 진보와 보수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사용했고, 0점을 진보, 5점을 중도, 10점을 보수로 표기한 그림에 스스로의 이념을 표시하게 하여서 총 11점 척도의 연속형 변수이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들은 주관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자기평가 방식으로 이념을 측정하는 것에 회의적이며, 정책에 대한 태도로 이념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armines and D'Amico, 2015; Ellis and Stimson 2009; Zschirmt, 2011). 이런 논쟁들을 반영하여, 대북관, 이념진영에 대한 인식, 복지와 경제성장에 대한 태도 및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태도로 사용하여 정책태도 변수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²⁾ 각각의 네 가지 문항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1로, 진보적 입장을 0으로 측정한 네 가지 더미변수를 만들고, 이 네 변수의 평균값으로 정책태도를 측정했다.

가설 2의 독립변수인 당파적 지지는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사람을 1로 나머지를 0으로 한 더미변수로 측정했다. 당파적 지지의 대리 지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오감정

2) 정확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각각의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까우십니까? 1. ①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 ②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가 필요하다. 2. ① 한국정치는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② 한국정치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3. ① 복지보다 경제성장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② 경제성장보다 복지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4. ① 집회 및 시위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허용해서는 안된다, ② 집회 및 시위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허용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질문에서 ①의 의견에 가깝다고 응답한 사람을 보수로, ②의 의견에 가깝다고 응답한 사람을 진보라고 간주하였다.

과 민주당에 대한 호오감정도 사용했다.³⁾

가설 3의 독립변수인 성과 기반 평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 기관의 대응을 평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대통령, 행정부, 전문방역기관(질병관리본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네 가지 정부기관들이 각각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지 혹은 못하고 있는지를, ‘매우 못하고 있다’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까지 총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네 가지 기관에 대한 평가의 평균값을 만들어 성과 평가 변수를 생성했는데, 별도의 추가분석에서는 네 기관별 평가를 분리하여 분석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도 활용했다. 정부 정책을 ① 입국절차 강화 등 해외유입 차단, ② 확진자 발견, 접촉자 격리 등 차단조치, ③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완화 조치, ④ 마스크 공급, 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위의 정책들을 ‘매우 못하고 있다’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까지의 다섯 가지 보기로 평가하게 하였다.

네 번째 독립변수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악화 그리고 본인의 종사 업종 경제상황 악화⁴⁾에 대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측정했다. 소득 감소 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⁵⁾ 코로나19로 인한

- 3) 일부 연구는 대통령국정운영평가도 당파성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사용하지만, 이 변수는 세 번째 가설의 독립변수인 성과기반 평가에 개념적으로 더 유사하기 때문에 당파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 4) 이 문항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개월간 귀하 본인과 국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나의 소득, 2. 나의 가구 전체 소득, 3. 내가 일하는 업종의 경제상태,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동일하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위 세 가지 문항 답변에 대해 나빠졌을수록 숫자가 큰 5점 척도로 측정하기도 했고, 약간 나빠졌거나 매우 나빠졌다고 한 응답으로 1로 나머지를 0으로 한 더미변수도 생성했다.
- 5) 이 문항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다, ② 다소 적다, ③ 크지도 적지도 않다, ④ 다소 크다, ⑤ 매우 크다, ⑥ 잘 모름.” 응답 중 잘 모름이라고 답한 사람은 결측값으로 하고, 위험이 적다에서부터 크다까지의 총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기도

실직 위험,⁶⁾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 변화⁷⁾ 등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도 확인했다. 피해의 종합적인 규모를 알기 위해서 위의 여섯 가지 문항을 다 합친 독립변수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여섯 가지 문항에서 위험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 응답을 1로 한 더미변수를 각각 생성한 뒤, 여섯 개의 더미변수를 모두 합했기 때문에 0점에서부터 6점까지의 척도를 가진 변수이다.

다섯 번째 독립변수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는 의견부터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까지 총 5점 척도의 변수로 측정했다.⁸⁾

통제변수로는 세대, 학력, 성별, 결혼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가구소득과 고용형태 등 경제변수를 사용했다. 세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로 구분된 5점 척도의 변수이며, 학력은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된 6점 척도이다. 성별은 여성이 1인 더미변수이고, 결혼 여부는 기혼자를 1로 코딩한 더미변수이다. 가구소득은 0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각각 100만원 단위로 구분된 11점 척도이다. 고용형태에 대

하였고, 위험이 다소 크다고 매우 크다고 답한 사람을 1로, 나머지 응답을 0으로 한 더미변수로도 사용했다.

- 6) 이 문항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할 위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다, ② 다소 적다, ③ 크지도 적지도 않다, ④ 다소 크다, ⑤ 매우 크다, ⑥ 잘 모름.” 변수 코딩 방식은 각주 2번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 7) 이 문항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귀하는 다음의 근무형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변화없음, ② 유급휴직, ③ 무급휴직, ④ 권고사직, ⑤ 해고, ⑥ 이직.”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0으로 나머지 모든 응답을 1로 한 더미변수로 코딩했다.
- 8) 이 문항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이 귀하의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 됐다, ② 거의 도움이 안 됐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한 보기는 상용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총 8개 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상용직과 고용주 및 자영업자만을 1로 코딩하고 나머지를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학생, 주부, 무직 혹은 구직 중이라고 답한 사람 역시 0으로 간주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기술통계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중속변수=국가책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1,507	3.293	0.736	1	4
중속변수=국가역할 확대					
치안과 질서유지	1,507	4.256	0.813	1	5
행정능력	1,507	4.257	0.831	1	5
조세수입	1,507	3.388	1.097	1	5
노동자 권익 법적 보호	1,507	3.809	0.941	1	5
경제적 격차 해소	1,507	4.036	0.943	1	5
기업 활동 지원	1,507	3.625	0.961	1	5
가설 1 독립변수=이념					
자기평가이념	1,507	4.701	2.024	0	10
정책태도	1,507	0.681	0.262	0	1
가설 2 독립변수=당파성					
민주당 지지	1,507	0.315	0.465	0	1
문재인 호오감정	1,507	42.654	29.768	0	100
가설 3 독립변수=성과 기반 평가					
정부 대응 평균	1,507	3.490	0.922	1	5
대통령	1,507	3.242	1.285	1	5
행정부	1,507	3.169	1.124	1	5
전문방역기관(질병관리본부 등)	1,507	4.210	0.955	1	5
지방자치단체	1,507	3.337	1.010	1	5
입국절차 강화 등 해외유입 차단	1,507	2.971	1.309	1	5
확진자 발견, 접촉자 격리 등 차단조치	1,507	3.745	1.082	1	5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완화 조치	1,507	3.270	1.121	1	5
마스크 공급	1,507	3.581	1.087	1	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507	3.613	1.059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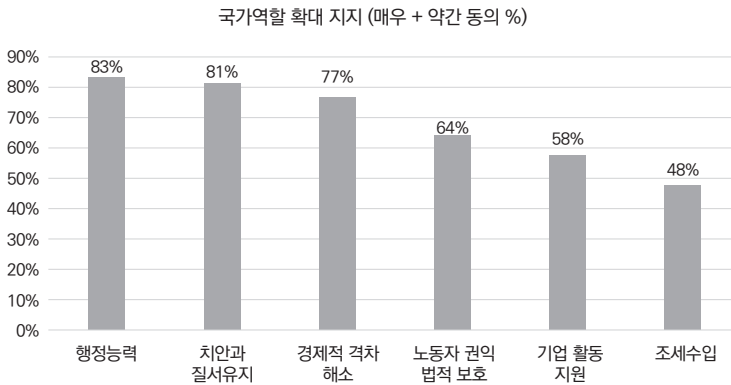
가설 4 독립변수=개인 피해 정도					
코로나19 경제 피해 합계	1,507	3.735	0.700	1	5
나의 소득 상황	1,507	3.634	0.826	1	5
가구 전체 소득 상황	1,507	3.721	0.793	1	5
내 업종의 경제 상태	1,507	3.852	0.840	1	5
코로나19 감염 위험	1,466	3.109	1.037	1	5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위험	901	3.029	1.227	1	5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변화	936	0.183	0.387	0	1
코로나19 위험인식과 경제피해 합계	1,507	2.317	1.610	0	6
가설 5 독립변수					
재난지원금 가계 경제 도움	1,507	3.81553	1.0167	1	5
통제변수					
가구 소득	1,507	4.992	2.385	1	11
고용상태	1,507	0.420	0.494	0	1
학력	1,507	3.725	1.076	1	6
세대	1,507	3.253	1.441	1	5
성별(여성=1)	1,507	0.504	0.500	0	1
결혼여부	1,507	0.608	0.488	0	1

본격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응답 분포가 어떤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응답자 총 1,507명 중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668명(44.33%)이고, 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639명(42.40%)이다. 반면, 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174명(11.55%)이고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명(1.73%)뿐이어서 매우 많은 응답자가 감염병 위험 대응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코로나19 시대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을 세부 영역별로 질문했을 때의 응답분포이다. 국가의 역할 확대에 매우 동의하거나 약간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친 히스토그램으로 행정능력(1,257명, 83.41%), 치안과 질서유지(1,224명, 81.22%), 경제적 격차 해소(1,154명, 76.58%), 노동자 권익의 법적 보호(963명, 63.90%), 기업활동 지원(878명, 58.26%), 그리고 조세수입(728명, 48.31%) 순으로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합의이슈에 해당하는 행정능

력이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높은 반면, 위치이슈에 해당하는 노동자 권익의 법적 보호나 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그림 1〉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영역별 찬성 의견



IV. 분석결과

1. 각 가설의 경험적 타당성

〈표 3〉은 누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한 다중회귀분석모델의 결과이다. 모델 1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지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이며, 모델 2부터 7까지는 각각 치안과 질서유지, 행정능력 강화, 조세수입 확대, 노동자 권익의 법적 보호, 경제적 격차 해소노력, 기업활동 지원의 여섯 가지 영역에서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이다.

〈표 3〉 코로나19 시대 국가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견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감염병위험 대응 국가책임	치안과 질서유지	행정능력	조세수입	노동자 권익 법적 보호	경제격차 해소	기업활동 지원
이념	-0.021*	-0.022	-0.028*	-0.073***	-0.056***	-0.072***	0.020
	(0.011)	(0.012)	(0.012)	(0.016)	(0.014)	(0.014)	(0.016)
민주당 지지	-0.086	0.053	0.046	0.319***	0.061	0.037	0.023
	(0.046)	(0.049)	(0.050)	(0.058)	(0.053)	(0.050)	(0.061)
성과 기반 평가	0.018	0.156***	0.146***	0.271***	0.151***	0.144***	0.038
	(0.027)	(0.031)	(0.032)	(0.041)	(0.035)	(0.035)	(0.038)
경제 피해 정도	0.156***	0.108***	0.152***	0.002	0.119***	0.129***	0.120**
	(0.028)	(0.031)	(0.031)	(0.039)	(0.035)	(0.033)	(0.039)
재난 지원금	0.050*	0.066**	0.076**	0.136***	0.123***	0.166***	0.023
	(0.022)	(0.024)	(0.025)	(0.032)	(0.028)	(0.028)	(0.029)
가구소득	-0.003	-0.006	0.003	-0.018	-0.002	-0.018	0.007
	(0.009)	(0.010)	(0.010)	(0.012)	(0.010)	(0.011)	(0.011)
고용상태	0.035	-0.012	-0.006	0.044	0.044	-0.002	0.079
	(0.041)	(0.045)	(0.046)	(0.055)	(0.051)	(0.049)	(0.055)
학력	0.051**	-0.027	-0.029	-0.069**	-0.091***	-0.055*	-0.023
	(0.018)	(0.020)	(0.021)	(0.024)	(0.022)	(0.023)	(0.024)
세대	0.000	0.014	0.019	-0.045*	-0.078***	0.009	0.018
	(0.016)	(0.017)	(0.017)	(0.021)	(0.020)	(0.019)	(0.021)
여성	0.014	-0.051	-0.020	0.047	0.069	-0.021	-0.063
	(0.039)	(0.042)	(0.042)	(0.053)	(0.049)	(0.047)	(0.052)
기혼	-0.056	0.066	0.031	-0.016	-0.022	-0.047	0.073
	(0.046)	(0.049)	(0.051)	(0.064)	(0.059)	(0.057)	(0.062)
상수	2.418***	3.217***	3.032***	2.624***	3.168***	3.046***	2.799***
	(0.202)	(0.219)	(0.220)	(0.282)	(0.243)	(0.249)	(0.262)
관찰개수	1,507	1,507	1,507	1,507	1,507	1,507	1,507
R-squared	0.035	0.083	0.086	0.229	0.132	0.148	0.019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 p<0.01, * p<0.05

첫 번째 가설의 주장처럼 스스로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의 책임이며 치안과 질서 유지(모델 2)나 기업활동 지원(모델 7)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본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념을 정책 태도로 측정했을 경우에도, 진보적인 정책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조세수입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 경제적 격차해소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두 번째 가설에서는 우선 정당지지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자 더미 변수를 사용하여 당파적 지지 가설을 검증했을 때, 조세수입에서만 당파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했고 다른 변수에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파적 지지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 호오감정으로 측정했을 경우, 여섯 가지 국가 역할 중 조세수입, 노동자 권익 법적 보호 및 경제적 격차해소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기업활동 지원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했다.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정부기관들(대통령, 행정부, 전문방역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 코로나19 대응에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 평가한 응답을 사용한 결과,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일수록 감염병 국가 책임 문항과 기업활동 지원을 제외한 다섯 가지 분야에서 국가 역할 확대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 가설인 당파적 지지와 현상적으로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 평가를 전문방역기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평가로만 한정해서 분석했을 때에도 결과는 동일했다.

또한 기관 대응 대신,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해외 유입차단, 확진자 발견과 격리 등 차단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공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평가 문항을 사용했는데, 감염병 국가 책임 문항을 제외하고 여섯 가지 영역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코로나19 관련된 정부 정책 중 정치적으로 가장 논쟁적이었던 것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외국인 입국 금지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평가 중 입국절차 강화 등 해외유입차단에 대한 평가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결과는 동일했다.

네 번째 가설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피해 정도를 보면, 조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 피해 이외에 감염 위험이나 실직 위험 등 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사용해 측정했을 때에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섯 번째 가설인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기업 활동 지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했다. 즉 재난지원금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행정, 조세, 노동보호, 경제적 격차 해소 등 포괄적 영역에서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즉각적인 소비촉진 효과나 재분배 효과와 별개로, 재난지원금의 수혜 경험으로 인지된 공공복지의 효용감이 향후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데 대한 지지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또한 주목할 점은, 국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념이나 당파성 같은 장기적 변수에 의해 안정적으로 형성된 측면보다는 코로나 상황의 단기적, 유동적 변수에 의해서 더 분명하게 영향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성과 기반 평가, 경제적 피해 정도, 재난지원금의 효용에 대한 평가 등의 변수의 효과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위의 변수들의 효과는 질서유지나 행정능력 향상 등과 같은 합의이슈와, 노동자 권익이나 경제적 격차 해소와 같은 위치이슈에서 모두 유의미했다.

특히 가설3과 가설5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했거나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이견의 여지가 많은 이슈에서도 국가 역할 확대를 요구할 확률이 확실히 높았다. 노동자 권익이나 경제적 격차 해소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대립적이고 이념적으로 찬반이 갈

리는 대표적인 위치이슈인데, 국가의 해결능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민들이 이러한 첨예한 위치이슈 역시도 국가가 역할을 확대하여 갈등적 이슈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2. 상호작용 효과 분석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표 1>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각 가설들 간의 충돌하는 이론적 예측을 상호작용모델로 분석하여 결과를 확인해보았다. <표 1>에서 정리된 총 여섯 가지의 상호작용효과 중에서 세부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은 당파적 지지와 성과기반 평가 간 상호작용모델이었다. 나머지 상호작용모델은 모든 종속변수에서 유의미하지 않거나 조세수입 확대에서만 유의미하여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다.⁹⁾

당파적 지지와 성과기반 평가 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당파적 지지 가설과 성과 기반 가설 사이에서 충돌된 선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성과 평가가 당파성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면 상호작용효과는 아주 소수의 예외적 관찰치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문의 전체 응답자 1,507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75명(31.52%)이고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75명(44.79%)이며 민주당 외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7명(23.69%)이다. 즉,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총 1,032명(68.48%)인데, 이 중에서 대통령이 코로나 19 대응을 대체로 잘하고 있다거나 매

9) 이념과 성과기반 평가 간 상호작용, 이념과 경제피해 간 상호작용, 이념과 재난지원금 간 상호작용은 조세수입확대 의견에서만 유의미했고, 당파적 지지와 경제피해 간 상호작용은 감염병 대응 국가 책임의견에서만 유의미했다. 나머지 종속변수에 한해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3명으로 32.27%다. 보통이라고 한 평가(285명)까지 합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최소한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59.88%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전문방역기관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보다 더 커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1,032명 중 809명(78.39%)이 전문방역기관이 매우 잘하고 있거나 대체로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의 비율만으로도 시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가 당파적으로 치우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민주당 지지와 성과기반 평가 간 상호작용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감염병위험 대응 국가책임	치안과 질서유지	행정능력	조세수입	노동자 권익 법적 보호	경제격차 해소	기업활동 지원
민주당지지* 성과기반평가	0.179*** (0.054)	0.221** (0.068)	0.200** (0.067)	0.139 (0.084)	0.163* (0.071)	0.099 (0.067)	0.278** (0.088)
민주당 지지	-0.791*** (0.213)	-0.819** (0.278)	-0.744** (0.273)	-0.228 (0.338)	-0.582* (0.282)	-0.355 (0.270)	-1.075** (0.352)
정부 대응 평가	-0.016 (0.030)	0.113** (0.035)	0.107** (0.036)	0.244*** (0.047)	0.120** (0.040)	0.125** (0.041)	-0.016 (0.043)
이념	-0.022* (0.011)	-0.022 (0.011)	-0.028* (0.012)	-0.074*** (0.016)	-0.056*** (0.014)	-0.072*** (0.014)	0.019 (0.016)
경제 피해 정도	0.151*** (0.028)	0.102*** (0.030)	0.147*** (0.030)	-0.001 (0.039)	0.115** (0.035)	0.126*** (0.033)	0.113** (0.039)
재난지원금	0.052* (0.022)	0.068** (0.024)	0.078** (0.025)	0.137*** (0.032)	0.125*** (0.028)	0.167*** (0.028)	0.026 (0.029)
가구소득	-0.004 (0.009)	-0.007 (0.010)	0.002 (0.010)	-0.019 (0.012)	-0.003 (0.010)	-0.018 (0.011)	0.006 (0.011)

고용상태	0.034	-0.014	-0.008	0.043	0.042	-0.003	0.077
	(0.041)	(0.045)	(0.046)	(0.055)	(0.051)	(0.049)	(0.054)
학력	0.050**	-0.028	-0.030	-0.069**	-0.091***	-0.055*	-0.024
	(0.018)	(0.020)	(0.021)	(0.024)	(0.022)	(0.023)	(0.024)
세대	-0.003	0.011	0.016	-0.048*	-0.081***	0.007	0.014
	(0.016)	(0.017)	(0.017)	(0.021)	(0.020)	(0.019)	(0.021)
여성	0.023	-0.040	-0.010	0.054	0.077	-0.016	-0.049
	(0.038)	(0.042)	(0.042)	(0.053)	(0.049)	(0.047)	(0.052)
기혼	-0.056	0.065	0.031	-0.017	-0.022	-0.047	0.072
	(0.045)	(0.049)	(0.051)	(0.064)	(0.059)	(0.057)	(0.062)
상수	2.554***	3.385***	3.185***	2.729***	3.292***	3.121***	3.010***
	(0.212)	(0.227)	(0.229)	(0.297)	(0.253)	(0.261)	(0.273)
관찰개수	1,507	1,507	1,507	1,507	1,507	1,507	1,507
R-squared	0.041	0.091	0.091	0.231	0.135	0.149	0.028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01, ** p<0.01, * p<0.05

〈표 4〉는 당파적 지지와 성과기반 평가 가설 간 상호작용모델의 분석 결과이다. 첫 번째 줄의 상호작용변수를 보면, 조세수입(모델 4)과 경제적 격차해소(모델 6)를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다. 당파적 지지를 문재인에 대한 호오감정으로 측정했을 때에도 결과는 동일하게 조세수입(모델 4)과 경제적 격차해소(모델 6)를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이러한 효과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의 예측한계(predictive margins)를 그린 〈그림 2〉를 보자. 왼쪽 상단은 〈표 4〉의 모델 1인 감염병 대응의 국가책임에 대한 예측한계이고, 오른쪽 상단은 〈표 4〉의 모델 2인 치안과 질서유지 강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지를 묻는 모델의 예측한계이다. 왼쪽 하단은 모델 3인 행정능력 확대에 대한 예측한계이고,

오른쪽 하단은 모델 5인 노동자 권익의 법적 보호에 대한 예측한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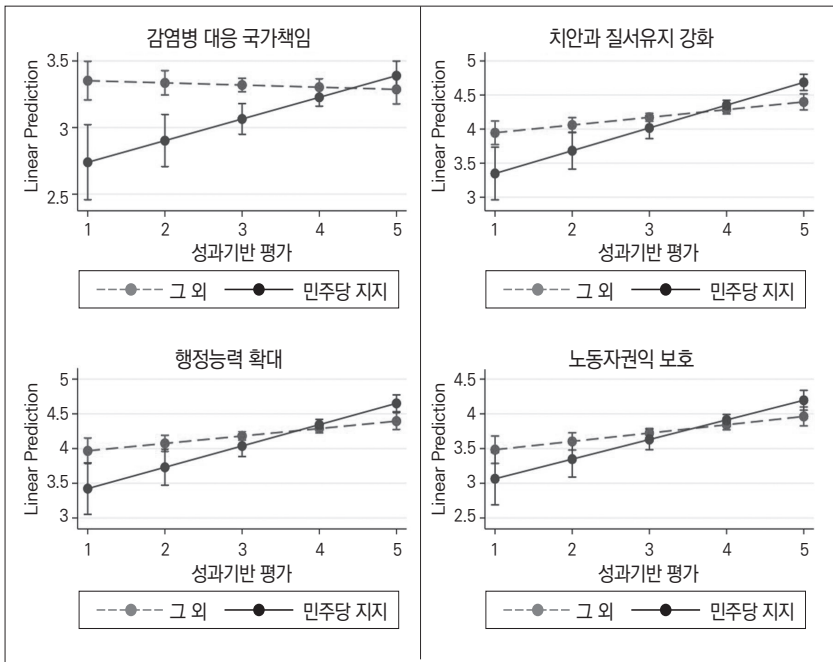
〈그림 2〉의 왼쪽 상단을 제외한 세 가지 그림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¹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그림 내 실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치안과 질서유지, 행정능력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상호작용모델을 분석한 이유가 당파적 지지와 성과 기반 간의 상반된 예측이므로 〈그림 2〉에서 보다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그림 내 점선)의 태도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치안과 질서유지, 행정능력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보다 중요한 점은 〈그림 2〉의 하단의 두 가지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행정능력 확대와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국가 역할 확대의견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림 2〉의 오른쪽 상단인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의견도 성과기반 평가가 최하인 지점과 최상인 지점에서만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고 생각할수록 민주당 지지자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공통적으로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그림 2〉가 보여주는

10) 모델 1의 감염병 대응 국가 책임의 경우,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과 방향이 반대인데, 민주당 지지자일수록 감염병 대응이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낮다. 이는 다소 의외의 방향성인데 국가 책임이라는 문항을 응답자들이 책임추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민주당 지지자 중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응한다고 생각할수록 감염병 대응이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감염병 대응이 국가책임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 역시 이 문항을 책임추궁으로 부정적인 평가로 생각했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결과를 정리하면,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에서 당파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정부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능력 있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질서유지나 행정능력 확대와 같은 합의이슈 외에도 노동자 권익 보호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위치이슈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림 2〉 당파적 지지와 성과기반 평가 간 상호작용효과의 예측한계



V. 결론

이 연구는 시민들의 이념 및 정치성향이라는 장기적 변수와 코로나19의 영향, 정부대응 평가, 재난지원금 평가 등 단기적 변수가 코로나 시대에 국가 책임에 대한 태도, 그리고 향후 치안, 행정, 조세, 복지, 노동보호, 기업지원 등 각 부문의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적 변수를 보았을 때, 이념 가설에서는 진보적 이념을 가질수록 감염병 위험 대응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고 총 여섯 가지의 국가 역할 세부영역 중 기업활동 지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를 지지했다. 그러나 당파성 가설의 경우 민주당 지지 여부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찬반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든 것은 조세 영역 뿐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진보 대 보수의 이념균열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인식 차이와 관련이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층인지 아닌지 여부는 큰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의 단기적 변수로서 우선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의 영향을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여섯 가지 국가 역할 중 기업활동 지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했다.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부대응을 긍정평가 할수록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가 커졌다. 한편 개인피해 가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은 사람일수록 세금 인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국가 역할 확대를 지지했고, 끝으로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국가 역할의 강화를 분명히 더 지지했다.

이상의 결과는 여러 학문적, 정책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국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진보-보수의 이념성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념 균열이 정부정책과 국가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2010년대 들어 한국에서 자산과 소득 등 계급균열이 복지·조세·노동정책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음이 발견되고 있다(강우진, 2012; 강원택, 2017; 강원택·성예진, 2018; 김도균·최종호, 2018). 이처럼 이념과 계급 등 현대정치의 고전적 균열의 축이 21세기 한국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며, 얼마나 지속적이고 견고할지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에 가장 일관되고 분명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단기적, 유동적 변수들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의 경험은, 방역에 직결되는 국가 기능 뿐 아니라 복지제공과 노동보호 등 다양한 국가역할까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정치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결과는, 정부의 성공적 방역 대응과 재난지원금 등 적극적 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향후 국가 역할의 확대를 지지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단기적 긍정 여론이, 보다 장기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에 대한 긍정평가의 정치적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의 한 가운데 있는 ‘지금’ 국가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대규모 복지제공의 효력은 점차, 혹은 급속히 약해져갈 수 있다. 지금 당장의 재분배 효과만 놓고 갑론을박 하는 것도 근시안적이지만, 단기적인 복지제공이 장기적으로 복지 국가의 정치적 기반을 확장해준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단지 장기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를 창출할 단기적 정치환경을 제공할 뿐이다.

벤딕스(Bendix, 1967)에서부터 스카치폴과 피어슨(Skocpol and

Pierson, 2002)에 이르기까지, 제도 변화의 ‘시점과 순서’는 결과적으로 사회시스템 전체의 제도적 배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그에 힘입은 제도개혁이 이 중대한 전환의 국면에서 압축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국가역할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뒤늦게 그 공간을 인위적으로 다시 열긴 힘들어질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위기대응이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넓히는 효과는, 실재하지만 영구하지 않다.

- 투 고 일: 2021년 1월 13일
- 심 사 일: 2021년 1월 29일
-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3일

참고문헌

- 강우진. 2012,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1권 2호: 67-94.
- 강원택. 2017,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몰락 혹은 분화?” 『한국정당학회보』, 16권 2호: 5-33.
- 강원택·성예진. 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205-240.
-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권 4호: 201-228.
- 길정아. 2019, “정부 신뢰, 회고적 투표, 그리고 당파적 편향: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권 3호: 31-69.
- 김도균·최종호. 2018,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17대 ~ 19대 대통령 선거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2권 5호: 57-86.
- 김동택 외. 2020,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연구보고서, 2020년 10월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김무경·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권 2호: 6-31.
- 김미루·오윤해. 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281호.
- 김승연. 2020,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61권: 64-66.
- 김영근. 2020, “코로나19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아시아연구』, 23권 2호: 47-74.
- 민병원. 2020, “재난의 정치학: 리스본 대지진과 근대국가에 대한 21세기적 성찰,” 『평화연구』, 28권 2호: 5-38.
- 박경미·한정택·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127-154.
- 박선경. 2020, “21대 총선은 코로나19로 결정된 선거인가?: 코로나19 대응평가와 야당심판론에 의한 투표 변경 분석,” 『현대정치연구』, 13권 3호: 85-118.
- 박성욱. 2020, “외국의 코로나 대응 경제정책,” 『월간 공공정책』, 179권: 23-25.
- 신진욱. 2020, “국가역량의 개념과 다차원적 분석틀: 국가역량 레짐의 다양성 연구

- 를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54권 1호: 65-100.
- 양재진. 2020,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월간 복지동향』, 261권: 12-17.
- 윤기웅·공동성. 2020,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행정논집』, 32권 3호: 535-570.
- 윤성이.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권 4호: 163-182.
- 윤성이·이민규. 2014,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세대 간 특성 비교: 주관적 이념 결정 요인과 이념표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4권 3호: 271-292.
- 윤홍식. 2020,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과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길’들,’” 『비판사회정책』, 68호: 113-142.
- 이기쁨. 2020,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별 정책대응과 고용지표 현황,” 『월간 노동리뷰』, 187권: 43-54.
- 이태석 외. 202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 『용역보고서』, 2020년 12월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임성호. 2020, “코로나 사태로 급해진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향해,” 『철학과 현실』, 126권: 87-104.
- 하상응·길정아. 2020, “유권자의 정치 관심은 언제나 바람직합가?: 정부 신뢰의 이념 편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4권 2호: 31-57.
- 홍민기. 2020,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189권: 21-38.
- 홍성만. 2020,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갈등증폭 연구: 감염병 재난대응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의료계간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권 4호: 1-32.
- Bendix, Reinhard. 1967, “Tradition and Modernity Reconsidered,”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9, No. 3: 292-346.
- Berman, Sheri. 2020, “Democracy, authoritarianism and crises,” *Social Europe*, March 30.
- Blekesaune, Morten and Jill Quadagno.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9, No. 5: 415-427.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rmines, Edward and Nicholas D'Amico. 2015, "The New Look in Political Ideology Research,"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8: 205-216.
- Dalton, Russel. 2010, "Ideology, Partisanship, and Democratic Development," Lawrence LeDuc, Richard G. Niemi, and Pippa Norris (eds.), *Comparing Democracies 3: Elections and Voting in the 21st Century* (Los Angeles, CA: Sage): 143-164.
- Ellis, Christopher and James Stimson. 2009, "Symbolic Ideology in the American Electorate," *Electoral Studies*, Vol. 28, No. 3: 388-402.
- Höffe, Otfried. 2020, "Über die Corona-Krise: 'Regierungen sind nicht für Glück zuständig'," *Frankfurter Rundschau*, April 15.
- Hofferbert, Richard. 1974, *The Study of Public Policy* (Indianapolis, IN: Bobbs-Merrill).
- Joas, Hans. 2003, *War and Modernity* (Cambridge, UK: Polity Press).
- Korpi, Walter and Joakim Palme. 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No. 5: 661-687.
- Krugman, Paul. 2020, "Covid-19 Reality Has a Liberal Bias," *New York Times*, May 14.
- Macfarlane, Laurie. 2020, "A spectre is haunting the West—the spectre of authoritarian capitalism," *Open Democracy*, April 16.
- Mann, Michael. 1988, *States, War, and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London, UK: Blackwell).
- . 1993,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 2: The Rise of Classes and Nation States 1760-1914*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son, Paul. 1993, "When Effect Becomes Cause: Policy Feedback and Political Change," *World Politics*, Vol. 45, No. 4: 595-628.
- Pfau-Effinger, Birgit. 2005, "Culture and Welfare State Policies:: Reflections on a Complex Interrel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4, No. 1: 3-20.
- Schattschneider, E. E. 1935, *Politics, Pressures and the Tariff* (New York, NY: Prentice-Hall).
- Schwab, Klaus. 2020, "Covid-19 is a litmus test for stakeholder capitalism," *Financial*

Times, March 25.

Simeon, Richard. 1976, "Studying Public Policy,"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9, No. 4: 548-580.

Skocpol, Theda and Paul Pierson. 200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ntemporary Political Science," Ira Katznelson and Helen V. Milner (eds.), *Political Science: State of the Discipline* (New York, NY: W.W. Norton): 693-721.

Stokes, Donald. 1963,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7, No. 2: 368-377.

Svalfors, Stefan. 2007,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Welfare State: Institutions, Social Cleavages, and Orientation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Tilly, Charles.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Oxford and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Zielonka, Jan. 2020, "Has the coronavirus brought back the nation-state?" *Social Europe*, March 26.

Zschirnt, Simon. 2011, "The Origins and Meaning of Liberal/Conservative Self-Identifications Revisited," *Political Behavior*, Vol. 33, No. 4: 685-701.

Abstract

**Public Perception on the State Role Expansion
during COVID-19 Crisis:
Effects of Ideological Disposition, Personal Damage,
and the Evaluation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Emergency Corona Relief Funds**

Sunkyoung Park & Jin-Wook Shin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itizens' ideological disposition, political partisanship, personal damage caused by COVID-19, and the evaluation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Emergency Corona Relief Funds upon their attitudes toward expanding the role of the state including taxation, welfare,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deological disposition had an evident influence on the citizens' attitudes, but the influence of partisanship was limited. Second, the experience of personal damage due to COVID-19 and the evaluation on the government responses and the Corona Relief Funds showed a strong correlation with the agreement on strengthening the state role. Third, even among those who did not support the ruling party, positive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performance had a systematic correlation with stronger support for expanding the state roles.

Key words: COVID-19, State Role, State Responsibility, Ideological Disposition, Disaster Damage, Government Performance, Emergency Corona Relief Funds

